

CO₂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및 법제도의 최신 동향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yyi@cau.ac.kr[†])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이산화탄소의 대기배출을 최소화는 우리세대의 핵심적 과제에 속한다.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축의 중요한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기술(CCUS)에 관심이 높다. 각 국가는 정책이나 법률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주요한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 한국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연구의 성과로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입법시에 고려되는 제도는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법률상 발전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추가적인 시설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포집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위상이 정립된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지중의 저장소의 개발은 CCS의 중요한 사항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처리를 위한 저장소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질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문제에 속한다. 적합한 저장소의 결정은 법률상 절차를 통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따른 비용은 충분한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